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野 공조 ‘쌍특검’ 속도내나

이정미 대표 “검찰, 수사의지 없어
국회 권한으로 특별검사법 추진”

민주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정의당, 패스트트랙 추진엔 반발
쌍특검 추진 공조에 양 당 입장차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쌍 특검 추진에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특검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에 즉각적인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저께 (6일)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

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로 이른바 쌍 특검이 추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쌍 특검 추진 방식부터 수사 대상까지 양당 입장이 달라서다.

정의당은 이른바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은 공정한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결과물 도출을 갖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차가 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과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전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

검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정의당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다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 추진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 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쌍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라며 특검 추진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내달 말 美 국민방문… 대북 핵 억제 강화

韓 대통령, 12년 만에 국민방문
김성한 실장 “70년동맹 성과 짚고
향후 발전방향·세부내용 구체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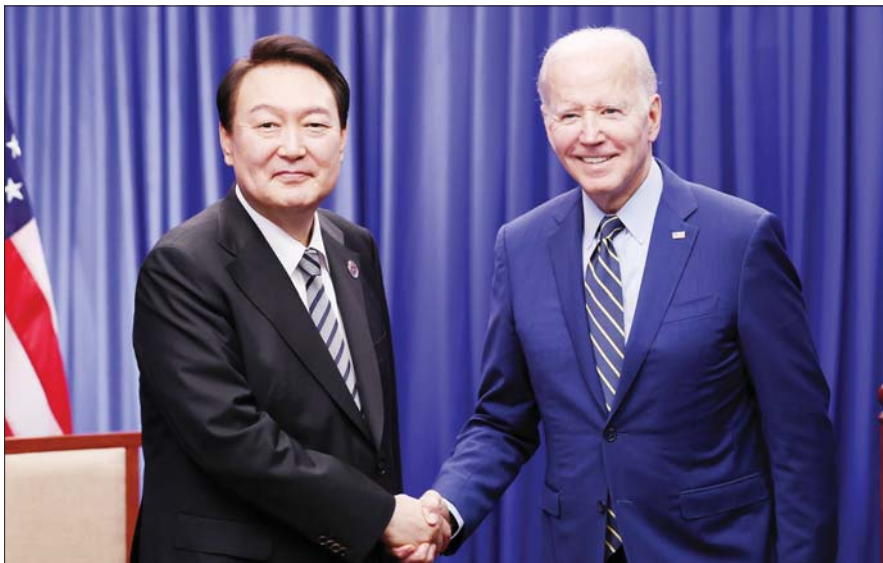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민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민 방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 국민방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은 전날 (7일) 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을 통해 동시에 발표됐으며 국민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민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토대로 국민 방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떠오는 시기에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

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산업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정권의 노동자, 국민 아닌 착취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 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주 69시간 근무, 노동자·기업 동반성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노동 시간 선택 폭을 넓힌 데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간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 이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나 야권에서 노동 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지속적인 69시간 업무로 노동착취 아니냐는 개념



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나 노동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의해 (노동) 문화가 새롭게 정립돼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 휴식을 하도록 해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